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 北 '선 제안'

김정은, 정상회담 수락은 물밑접촉 성과일 수도 남북 정상회담 징검다리...북미대화도 진전 수준

'가을 남북 정상회담' 개최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이 13일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먼저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9일 오전 관문점 채널 통지문을 통해 13일 관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남북정상회담 준비 관련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특히 북한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장관급 회담을 선(先)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월 관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올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의제로 내세워 먼저 나선 것은,

북미가 그동안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 등에 대해 물밑에서 접촉한 결과가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지 않은 것은 결국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하면 나서지 않게 된 것"이라고 운을 폈다.

그러면서 "거꾸로 남북관계에 현안이 없는데도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 호응했다는 것은 북한이 답보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에서 모종의 '양보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물밑 접촉에서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이행 방안의 수준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할로'를 개척하는 수준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선불리 북미 대화에 직접 나서서 이점을 잡히는 데 실패할 경우 북미 모두 내부적으로 불리한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징검다리'로 해서 뉴욕 유엔총회 기간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핵미사일 동결, 핵 신고,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 등의 문제들을 일괄 타결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북미 사이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6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적 대북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북한 역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작업 등에서 전보다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밝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다음 주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불런 보좌관은 지난 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또 만나기 위해 다시 북한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에 개최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뤄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경우, 남북 정상이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 등에서도 관문점 선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관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 남북 간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등도 모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밖에 4월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가을이 왔다' 서울 공연이나 남북 통일농구경기대회 서울 개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靑 "남북회담, '가을·평양'이 4·27 기본"

"평양 개최 확정된 사안으로 볼 수 없어... 만나봐야"

청와대는 지난 10일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장소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4·27 관문점 선언에 명시된 '가을, 평양' 조건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언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일단은 관문점 선언에서의 합의 내용이 평양이었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27 관문점 선언 마지막 줄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 장소는 평양을 기본으로 하되, 그렇다고 해서 '평양에만 국한된다',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확정된 사안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북한이 어떤 다른 장소를 선호하는지는 13일에 만나봐야 할 것 같다"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흘 뒤 예정된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의제로 다룰 남북 정상의 만남의 시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사전에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북한 정권수립일(9월9일), 뉴욕 유엔총회(9월18일) 등 9월에 내외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국제사회 이벤트들이 있는 만큼 적어도 남북 정상회담은 8월 말~9월 초에 성사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은 남북 정상회담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최소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면서 "저희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시기로 언제가 적절하다고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외에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4·27 관문점 선언 후속조치 이행점검의 포괄적 의미"라면서 전날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수준의 의제를 재확인했다.

"평양에서 이뤄질 경우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최소기간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상 간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지, 실무진이 준비하는 것이 맞춰서 정상회담이 잡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취해왔던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방안 외에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특별히 저희가 새로운 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0일 제1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전북·군산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채정룡 군산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전북경제 회생 위한 첫걸음 대된다

민주당 전북·군산경제특위 구성... 위원장에 채정룡

안호영(완진시장 국회의원) 신임 도당위원장을 맞이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전북경제 회생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에 따르면 이날 제1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전북·군산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채정룡 군산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최근 군산 현대중공업 및 GM군산공장의 폐쇄로 전북과 군산 경제가 매우 어려움에 처한 상태"라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 여론 수렴 및 중앙 관계부처

또는 기관과의 정책적 연대를 포괄 필요"가 있어 전북·군산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전북·군산경제특별위를 통해 특단의 지역경제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여당의 협력을 이끌어내 전북과 군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통일부 "800만달러 대북공여 적절한 시점에 추진 예정"

통일부는 지난 10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800만 달러 공여와 관련, 적절한 시점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제기구 공여 부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기구나 협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미국의소리(VOA)는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를 인용, 한국 정부의 800만 달러의 집행이 비핵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식량계획,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했지만, 북한의 도발 등으로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도적 대북지원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면서 800만 달러 공여를 통한 대북 인도주의 사업 집행이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800만 달러 공여와 관련해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채택과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공여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최저임금 격년제 담긴 개정안 발의

김학용, 업종·연령별 의무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제'로 해 업종별·연령별로 의무 적용하고,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여서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자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의원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임금 근로자 및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업종별 적용을, 근로자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를 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

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명시했다. 최저임금 결정도 매년 하던 것을 격년제로 바꿔 시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사용자 위원을 위촉할 경우 양대 노총 및 경제 5단체의 추천은 각각 2인으로 제한하고, 청년·여성·외국인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아르바이트생 등 비임금 근로자나 고용 취약계층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보다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성 논란을 부른 공익위원도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9명 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좋은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벗어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